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시위가 기세 좋게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여당도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교사 집회 주최 측(전국교사일동)은 17일에 낸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국회·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고충을 토로하듯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무고한 신고를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이 '정당한' 지도인지를 둘러싼 민원이나 법적 다툼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민원 창구 단일화 방안도 전담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민원은 교사 개인에게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 그리고 교사와 다른 공무원, 공무직 사이에 업무 분담을 둘러싼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이미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들은 교사의 민원까지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지도 고시안(이하 고시안)을 통해 교사가 생활지도할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 대책도 문제투성이다.

예를 들어, 고시안은 긴급한 경우에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도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체벌은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다. 결국 물리적 제지가 체벌인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방안도 결국 인력과 공간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담 인력 충원 방안이나 예산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나 몰라라 한 것이다.

핸드폰 등을 압수해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학생들을 더 통제하라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 말로는 교사를 지키겠다더니, 올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대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응해 '전국교사일동' 측이 "새로 부과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 대책을 8월 말까지 발표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민주당이나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생활기록부 기재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는 대안도 몇몇 법 개정에서 그칠 뿐,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사실 그들도 그동안 학교 내 갈등을 수수방관해 왔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왔다. 게다가 교사 수 감축에도 동의한다. 교사들의 고충이 더욱 늘어나는 데 큰 구실을 할 텐데도 말이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을 지지하자

교사들은 이참에 학교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대책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주말 집회 수준을 넘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미 집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다.

그리고 '전국교사일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연가, 병가, 재량휴업 등을 포함한 공교육 멈춤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파업이 불법인 한국에서 탄압을 무릅쓰고 "공교육 멈춤 행동"을 이끌겠다는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파업을 비난하는 정부와 우파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테지만, 교사들의 악화되는 처지 개선에 공감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초점이 형성될 수 있다.

교사들의 투쟁과 이를 지지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연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루 만에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파업은 교사들의 의식과 조직을 성장시킬 것이다.

9월 4일 교사들의 파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연대하자.

추천 동영상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youtube.com/watch?v=TeAD45wT1iA

wspaper.org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중국 부동산 위기, 미국 은행 위기,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의 전략 지형을 더 위험하게 만들 자들

8월 18일(미국 동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주일 미국 대사 램 이매뉴얼은 “이번 회의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이 체계화되고 진전될 것이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의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린다. 군사뿐 아니라 경제안보 등을 다루는 협의제도 논의될 것이다. 한미일 3국 군사연습도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는 등 군사 협력 수준도 높인다.

미국은 이렇게 한미일 3국의 안정적인 협의 구조를 갖춰, 이를 통해 중국을 겨냥한 집단 협력을 발전시키려 하는 듯하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동맹을 재편해 왔다. 쿼드(Quad)를 발전시켜 왔고, 영국·호주와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결성했다. 한미일 3국 협력도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일 군사 협력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생각하며 선택을 감행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는 상황 속에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미국 쪽으로 기울어 가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이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령부 후방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요인이라면서 말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바라는 한일 군사 동맹 결성에는 아직 조심스럽다. 중국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한일 군사 협력을 증진할 필요를 얘기해 왔다. 8월 16일 윤석열은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일 간 별도 협의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새 군사 협정이 향후 논의될 공산도 있다.

불안정 증폭

윤석열 정부의 친미·친일 외교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가 ‘신냉전’ 양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많이들 염려한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국과 중국조차 첨예하게 경쟁하면서도 필요하면 서로 협력하므로 윤석열이 너무 한쪽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판은 대개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같은 외교

적 해법 제안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위협을 관리하고자 대화를 해도,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 한국의 운신 폭이 줄어들고 있다. 균형 외교 같은 대안도 한국의 외교적 난제를 풀 대안은 못 된다.

오늘날 제국주의 국제 질서는 냉전 때보다는 20세기 초 영국과 독일이 경쟁하던 때와 더 유사해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두 국가가 경제적·지정학적으로 경쟁하며 상호 적대를 키우는 것을 보면 말이다.

오늘날에도 국제 질서는 매우 불안정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움직임들이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7월 27일 북한 ‘전승절’ 기념식에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대표단들이 모여 북·중·러의 공조를 보여 줬다. 특히 러시아는 국방장관을 북한에 보내 양국의 군사 협력을 도모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과 그 아시아 동맹국들의 공세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적으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북·중·러의 이런 공조는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할 진보적 대안이 아니다. 이 또한 또 다른 제국주의적 협력으로, 역내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한 요소다.

한미일 정상회의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제국주의적 갈등이 심화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상당한 후과를 일으킬지 모른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시리즈 강연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 마르크스가 알려줍니다

마르크스의 방법

1 노동의 소외

8월 23일(수) 오후 8시

참가 신청 bit.ly/0823-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장/국제연락간사 <마르크스주의의 방법>, <러시아 혁명: 희망과 좌절> 저자

2강. 변증법	일정 추후 공지
3강. 역사유물론	일정 추후 공지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